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 의혹 투성이

광주시 북구청이 건강복지타운 부지로 선정한 우산근린공원 내 북구 우산동 574-5번지 일원(점선 내).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이 건강복지타운은 지하로만 설계가 가능해 사업비가 급증하는 등 부지로써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적합 부지 선정 예산 2~3배 소요

"돈 부족하면 작게 짓죠" 엿가락 행정

과업지시서와 다른 설계 '희한한' 선정

광주 북구청이 추진하는 '건강·복지타운'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북구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부지 결정부터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모든 시설을 지하에 배치할 경우 수반되는 사업비 증가와 관련 별다른 대책도 없이 추진돼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지 선정 문제점**=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한다는 추진 배경은 적절했으나, 북구청은 근본적으로 지하 설계만 가능한 부지를 선정해 터파기 공사 등으로 현재 공사비의 2~3배 이상이 소요되며, 사유지 매입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는 등 '부적합 부지'를 결정했다. 그로 인해 추가되는 막대한 예산은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구청은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해 증액되는 예산을 아직 광주 유치가 결정되지도 않은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후 수영장을 경기장으로 활용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구상중이며, 따라서 현재 공사의 범위가 얼마나 확대 또는 축소될 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 유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이 가능할 지는 불확실하며, 북구청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그 규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지침과 달리 설계한 용역업체 선정**=북구청은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처음부터 이 부지에는 운동시설이나 아동시설로는 지상 건축물이 불가능했으나, '북구 건강·복지타운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서는 수영장 등 건강타운은 지상 1층~지하 2층, 아동복지관은 지상 2층으로 그 규모를 정한 것이다.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현상공모를 해야하지만, 향후 설계변경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한 제한입찰에 나섰다.

이 용역의 추정금액은 일선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적인 용역비의 수배인 5억7천900여 만원에 달하며, 당초 4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개 업체가 사전심사에서 탈락함으로써 북구청은 사실상 나머지 2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22일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문제는 대규모 예산에 비해 입찰 참여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며, 과업지시서 등에 의해 지상 2층과 지하 2층으로 설계한 2개 업체는 오히려 법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하고, 이와는 달리 지하로만 설계한 2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됐다는 것이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도 관련 지침의 최소 규모인 8명(위원장 포함)으로 한정시켜 3배수인 21명에서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탈락한 한 업체 관계자는 "결국 업체들이 서로 다른 지침을 갖고 설계안을 짰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며 "이는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이야기이며, 평가위원 수도 예산 규모에 비해 너무 적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과업지시서 등에 지상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동시설 중 보육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정한 것이며, 분명히 관련 법규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평가 당일 분위기가 관련 법규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뤄 지상과 지하로 설계한 업체가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건강·복지타운이 지하에 위치하지만, 지상 부위를 선큰가든(sunken garden, 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으로 꾸며 자연광과 통풍에도 신경을 쓰면 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예산으로는 지하 터파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추후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주민 편의시설인 이 시설 부지를 결정하면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조차 한차례도 거치지 않았다.

◇**사업개요**=북구 건강·복지타운은 우산근린공원 내 부지면적 1만487㎡, 연면적 7천795㎡에 166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0년 말 준공될 예정이며, 건강타운과 아동복지관 등 2개의 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계획으로 건강타운에는 3급공인 수영장을 비롯, 관람석, 탈의실, 목욕탕, 헬스장, 에어로빅장, 주차장 등이, 아동복지관에는 보호치료실, 단기보호실, 놀이시설, 발달센터, 정보화 및 세미나실, 아동상담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현재의 예산으로는 이 같은 시설 규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문화부 F1 반대 논리 반박

2010년 영암에서 열릴 포뮬러원(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F1 지원법 제정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개최를 앞두고 F1 지원법에 '올인' 하고 있는 전남도는 21일 'F1지원법 제정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한 전남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전날 국회 국제경기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됐던 문화부의 지원반대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성 검증…정부와 협의 거쳐"

"수익성 판명…사업 타당성 충분"

◇**F1 대회 공공성 여부**=문화부는 'F1대회의 상업적 성격상 국가 주도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국회에 내놓았다. F1대회는 상업성이 강하고 국가 대항전이 아닌 자동차기업 팀별 대항전임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대회로 보기 곤란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제파급 효과 등으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해 대부분의 F1대회 개최국에서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F1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등 F1의 세계적 추세는 이미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남도는 F1대회가 정부 승인없이 유치한 행사라는 주장과 관련해 "F1대회는 2005년 8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정부 승인 당시 F1 사업이 이미 포함됐고, 2006년 8월 국제행사 승인신청 등 모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고 문화부 주장을 일축했다.

◇**사업 타당성**=문화부는 "F1대회는 과다한 초기 투자와 부족한 수익성을 부담할 수 있는 대회 운영주체의 장기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재정적인 능력이 관건"이라며 낮은 사업 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와 대회운영기업 KAVO의 재정 상황, 개최 예정지의 취약한 접근성 및 숙박 등 관광여건, 거주 인구 부족, 낮은 국내 모터 스포츠 저변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국제행사의 타당성 여부는 단순 재무성 측면이 아니라 경제성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공공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가장 보수적인 조사를 수행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검증 결과에서도 국제행사로서 매우 높은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개최국당 평균 관람객이 20만명에 달하고, 관광수입 1천억~2천억원, 3천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전세계 6억명 이상의 TV시청 등을 통해 사업타당성은 이미 검증됐다"고 덧붙였다.

◇**국가 행정·재정적 부담**=문화부는 F1대회를 통해 소요될 과도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부담도 F1 지원법 제정에 대한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부는 "지원 법안은 정부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 제정시 전남도 국고지원 요청액 급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올림픽이 국비 6천52억원, 월드컵 7천164억원(추정)이 투입된 선례로 볼 때 7년 동안 국비 1천130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과도한 국가재정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F1 지원법 통과·예산 확보 총력

최인기의원, 한나라에 협조 구하고 문화부 설득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사진**)이 '포뮬러원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F1 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와 F1 경기장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국회 국제경기특위에서 F1 지원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과 홍일표 의원 등을 만나 F1 대회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시켰다.

또,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한나라당 이한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이번 추경에 F1 경기장 건설 비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여기에는 F1 경기장 건설 지원 예산을 외면한다면 여권의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최 의원의 압박이 약효(?)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 의원은 국회 국제경기특위 소속의 조영택 의원, 국회 예결위 소속의 김영록 의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토대로 대정부 압박을 조율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일 예결위 질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F1 경기장 건설 지원에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최인기 의원은 "아직 F1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추경에 F1 경기장 건설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F1 경기장 건설 지원 예산 문제를 여야 협상의 쟁점 사항에 포함시켜 추경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고 말했다./임동욱 기자 tuim@